



대선 경선후보 공약, 무슨 내용을 담고있나?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임연구위원)

<요 약>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모두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각 당의 대선 경선후보들은 현실 경제의 어려움은 도외시하고 민생공약, 복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선심성 공약에 골몰하고 있다.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오지만 개념조차 불명료하고 이것이 오히려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혼란을 방지하려면 규제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후보 자신이 어떤 체제를 지지하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복지공약은 현 제도만이라도 착실하게 시행해서 고령화 문제의 대처와 사회보장 사각지대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순서이다. 일자리 없는 복지는 허상이라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통일안보 공약 역시 현상 유지정책이 아니라 한반도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 번영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언론을 통해 나타난 공약 중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정치개혁 공약, 과학기술, 문화공약이다. 재벌개혁, 경제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등 수많은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한 들 정작 자기들 문제인 정치개혁에는 말이 없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21세기는 과학기술과 문화의 시대인데 이 분야 공약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후보로 비쳐질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한 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후보가 되려면 나라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비전과 국가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perfect storm)에 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조짐이 일더니 남유럽을 거쳐서 이제 EU국가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장기간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고 소득양극화는 물론 대중소기업, 수출·내수기업 간 각 분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113.2%(2011년 기준) 되는 나라에서 수출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금년 6월 월별 경상수지가 최대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수입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한 불황형 흑자이다. 사상 최대의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은 이유이다. 7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8% 감소했고 수입 또한 5.5% 줄었다. 이렇듯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취업불안, 고용불안, 전세불안, 노후불안, 건강 불안 등이 국민의 마음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맞고 있다.

국민의 마음에 울림이 없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후보 확정을 위한 당내 경선이 한창이다.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각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각 후보자들 공히 현실 경제의 어려움은 도외시하고 선심성 공약에 골몰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 협력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모두가 사탕과 꿀만 주려고 한다. 그것도 공간에 물건을 싸놓고 주려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비었는데 빛을 내서 주려고 한다. 선심성 정책임이 분명한데도 민생정책이나 복지정책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 당의

예비주자들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국력에 버금가는 복지정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퓰리즘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이렇고서도 '남이 하면 선심성 공약, 내가 하면 복지 공약'이라 한다.

더욱더 큰 문제는 나라를 이끌고 가겠다는 후보들이 내놓은 비전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각 후보들이 내세운 슬로건을 보면 여당 후보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마음껏 대한민국' '걱정 없는 나라', 등을 내걸고 있다. 야당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 '저녁이 있는 삶', '평등한 국가, 내게 힘이 있는 나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안철수 원장은 아직 슬로건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슬로건은 나름의 시대적 고민을 담고 있지만 국민들 마음에 울림이 없다. 삶이 팍팍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면 목표가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하는데 모두가 추상적이다. 핵심 단어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다 보니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혼란스러운 경제민주화

이런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정책공약이다. 하지만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공약은 아무리 봐도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공약 집이 나오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현재 보도를 중심으로 보면 참신한 발상이나 차별화된 정책을 발견하기 힘들다.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공약이 있는가 하면 같은 정책을 가지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도 발견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제민주화'이다. 여야 각 당 후보들은 하나같이 재벌 때리기가 경제민주화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서 개념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먼저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공약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현재의 이슈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다보니 '경제민주화'의 진의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제민주화는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를 어떻게 유지·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시장자유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혹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인지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각 당의 행태로 봐서는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어떤 체제도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경제기본질서의 민주화를 이행하는 것이다. 즉 '시장질서의 자유·공정·경쟁제고'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그런데 각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보면 자유, 공정, 경쟁제고 등 시장질서에 대한 방향제시와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재벌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재벌규제에 대해서도 경제력 집중인지 소유 집중인지 그 구체성이 없다. 생산 집중은 규모의 경제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생산 집중의 문제까지 다루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접근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소유의 집중 역시 소유의 절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유분산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불평등만을 교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영향력 또한 여기에 비례하여 행사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경제정책의 집행과정이다. 경제정책의 수립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공개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공개행정, 참여행정,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정책의 핵심은 일자리와 고령화 대비

많은 후보들이 복지 공약을 내놓았지만 재정조달 방안까지 제시한 후보는 한두 명에 불과하다. 올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현 복지지출보다 5년간 총 281조원(연평균 56조원)과 638조원(연평균 12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에 비추어 봐도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 후보들의 공약도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럽다.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구조는 복잡하다.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 그리고 17개 기금으로 되어 있다. 관련 기관도 11개 부처이고 복지서비스는 293개나 된다. 운용에 있어서도 복지재정의 편중성, 의무지출에 기인한 소득이전지출의 자동증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부담 가중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금년에 확대 시행되고 있는 5세 이하 무상보육만 보더라도 예산부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령화이다. 고령화만으로도 사회보장성 복지지출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게 되어 있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등 일정 자격이 되면 복지수혜자가 되는 법정 자격급여도 복지예산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군인 및 공무원 연금 지원,

보육료 지원 등 소득이전 지출 증가도 만만치 않다. 이렇듯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현재 여야 각 후보들은 사회보장 사각지대부터 개선하려는 생각은 않고 살만한 사람까지도 퍼주려는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표를 얻으려고 한다. 여야 후보 공히 0~5세까지 무상보육, 의무 교육 확대 등이 그러하다. 후보 중에는 성장과 복지의 연계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미래구상이 보이지 않는다.

통일 안보분야 역시 미래 비전은 없고 현상유지 정책만 제시하고 있다. 당도 후보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평화를 민주통합당은 평화·공영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목표는 없다. 각 당의 경선후보 역시 한반도 미래발전을 위한 통일 비전과 구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통일의 기회는 다가오고 있는데 북한주민 정책,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번영 정책, 주변 4강 국가와의 통일외교 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통일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각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보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 강력한 안보에 바탕 한 평화통일, 6.15.10.4 공동선언 존중과 실천,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 남북균형 발전” 등이다. 공약의 구체성도 떨어진다. 한 후보만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 공약은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학부모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을 제시하고 이 목표에 부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가고 싶은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하고 학부모에게는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소박한 꿈이다.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함께하는 행복교육(영유아 교육),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꿈나무 안심학교(복합시설 확대), 기회를 열어주는 교육(학벌경쟁에서 능력존중으로), 학력차별 금지(채용서류에 학력기재 금지), 입시위주에서 진로교육 위주로 전환, 반값등록금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주고 있을까?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후보들의 공약에서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과학기술과 문화발전에 대한 공약이다. 단지 과학기술부 장관 부활과 부총리 격상 정도이다. 미래는 과학기술과 문화가 이끌어 가는 시대인데 이런 분야에 대한 공약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후보로 비쳐질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과 문화발전 공약은 정치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신껏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국민들은 이런 공약을 통해 후보가 펼치려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도 아직 이런 분야에 대한 공약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정치발전 공약은 무엇인가?

눈에 띄지 않는 또 다른 공약의 하나가

정치개혁 공약이다. 국민은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는데 막상 정치인인 후보들은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가치정당 추구와 생산적 국회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승자독식의 정치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 현재는 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한 표가 귀한 상황에서 경선 표를 갉아먹을 공약을 내세우기가 시기적으로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들에게 이것저것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치발전 공약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구체적인 정치개혁 공약이 어렵다면 큰 방향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재벌개혁, 경제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등 수많은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한 들 정작 자기들 문제인 정치개혁에는 말이 없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대선 후보 경선기간 중이라 구체적인 정치발전공약을 발표하기 힘들다면 누구나 공감하는 공약이라도 내 놓아야 한다. 이를테면 정치인들의 거짓말 안 하기, 고운 말 쓰기 등이다.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정제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거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키지 못하는 정치개혁공약보다 정치인들이 쓰는 용어부터 순화시키겠다는 공약이 훨씬 믿음을 줄 수 있다.

한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 나서려고 한다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과 국가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은 후보가 제시한 비전과 공약을 통해 미래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각 후보들이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본 칼럼은 재단의 공식의견이 아닌
필자의 개인견해입니다.**